電子工業을 둘러싼 美·日·EC의 通商政策

1 美·日 관련정책

1) 개 황

가. 美·日 무역관계

미국의 對日 무역적자(통관 기준)는 달라高 현상과 확고한 내수를 배경으로 '83년 이래 급속히 확대되어 '87년에는 563억弗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후 환율조정의 효과가 있어, '88년의 대일 적자액은 전년동기대비 7.6% 감소한 521억弗로 되었다.

그러나, '88년 6월 이후, 일본의 對美 수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최근 미국 무역적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對日 적자의 비율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美·日 양국의 무역수지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나. 하이테크 마찰

최근, 미국은 하이테크 기술에 있어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註1)

이러한 배경은 ①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하이테크 분야에 일본의 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 (註2) ②더욱이 하이테크 기술에 있어 가정용 기술과 군사용 기술의 장벽이 낮아지게 되어, 일본의 산업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註3) 等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FSX 문제, HDTV의 규격 통일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註1)

MIT의 논문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일본의 금융·산업이 하이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정부의 산업정책도 이를 지원해 온 결과, 일본의 하이테크 산업은 미국의 국가 안전보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이르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소련의 핵탄두보다 크면 컸지 못하지 않다.」

(註2) IC에 있어서 일본의 쉐어는 약 50%, 1M DRAM에서는 약 90%에 이른다. 또 앞으로 대형시장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HDTV의 개발에 있어서도 일본이 크게 앞서고 있다.

(註2) 미 국방부는 「'89년 5월 국방상의 22개 중요기술에 대해 美·日를 비교,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로보트 공학,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세하고, 광통신, 내열복합재료 등에서는 美·日이 경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 對美 직접투자

외국인에 의한 미국 기업의 매수, 합병 등에

본고는 電子工業年鑑('90. 3 電波新聞社刊)의 내용중 美·日·EC의 통상부문을 정책 및 현안과제 중심으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힌다. (편집자 註)

관해, 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규제할 수 있다고 종합무역법의 엑슨 플로리오 조항에서 투자 규제를 밝혔다.

또 미 하원의 브라이언트 의원은 미 의회에 외국자본 기업의 對美 투자 관련, 정보의 등록·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이들 정보를 공개시킨다는 요지의 법안을 제출했다.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광범위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본 법안은 국제적인 투자 자유화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對美투자를 저해하고, 미국 경제, 더나아가서는 세계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미국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기존법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관계기관끼리 상호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마코우스키 법안이 현재 상정되어 있다.

이러한 對美 직접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일본의 대미 직접투자 급증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88년 일본의 대미 직접투자는 영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라. 美·日 간의 주요과제

(1) 구조문제 협의

수퍼 301조에 근거한 우선 협상대상국 발표시 부시대통령이 제안한 美·日 구조문제 협의에 대해서는, 먼저 아르슈·서미트때 美·日 수뇌회담에서 그 개최를 합의한 바 있고, 또한 1년 이내에 양국 수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 '90년 봄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본 협의의 제1차 회의는 동경에서 개최('89. 9. 4~9. 5)하여 쌍방의 관심사항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더욱이 워싱턴에서 제2차 회의('89. 11. 6~11. 7)를 열고, 제1차 회의를 근거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행하였다.

(2) 종합무역법

'88년 8월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통상법 301조 관계)과 상호주의 원칙을 이유로 수입억제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다각적인 자유무역체제를 손상시키고 보호주의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89년 5월 26일 소위 수퍼 301조에 근거해, 일본이 우선협상대상국에 지정되어 일본의 관행중 '수퍼 컴퓨터', '인공위성의 정부조달', '임산물에 관한 기술 수입제한'의 3개 항목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되었다.

일본의 기본적 입장은, 일방적 제제조치를 배경으로 한 협상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미국측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도 많아, 금후 이러한 점에 대해 적정한 조정을 계속하고, 또 일본 무역관행상 개선점은 스스로의 책임하에 시정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대응 방침이다.

(3) 최근의 對日 논조

최근, 미국은 거액의 무역적자, 하이테크 기술에 있어서의 美·日의 경쟁, 對美 직접투자의 급증 등을 배경으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악화하고 있다. 이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수정주의」적인 논조로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나 논리를 결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논조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정주의의 특징으로서는, 첫째, '일본은 소위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일본 특수론」 둘째, '일본의 세계에 대한 무역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적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에 무엇인가 불공정한 장벽이 있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일본 불공정론」 세째, '일본과의 과거 통상교섭은 거의 눈에 보이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결과를 위임하고, 이것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 제재를 배경으로한 위협과 실제적인 제재도 불사해야 한다'는 「대일 제재필요론」 等을 들 수 있다.

2) 반도체

가. 문제발생 배경

1947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가 발명되고, 1958년 TI社의 키루비가 집적회로(IC)의 시험제작 성공한 이래 '60년대까지는 미국이 세계 반도체 산업의 대세를 점하고 있었지만,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일본이 급격히 추격해, '86년에는 무역시장에서 미국을 제치게

되었다.

특히 DRAM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분야에서 일본이 쉐어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 기업의 DRAM으로부터의 철수가 이어져, 메모리시장을 잃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미국내에 고조되었다. 또한, '84년 호경기에 대한 반동으로 '85년에는 반도체 산업이 일전에 없었던 불황을 맞아, 미국 기업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 부진에 직면하게 되었다.

나. 美·日 반도체 협정 체결

'85년 6월 미국 반도체 공업협회(SIA)는 미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일본을 제소했다. 그 근거는 과거 일본 정부 정책에 기인하는 국내의 폐쇄적 시장구조를 배경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이 과대한 설비투자를 행해, 덤핑 수출로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었고, 또한 일본 시장에 있어서도 덤핑판매에 의해 미국 제품의 시장확대가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301條의 제소를 받고 '85년 8월부터 美·日 정부간에 협의가 개시되는 한편, '85년 6월에는 일본 기업의 64K DRAM, 同 9월에는 EPROM에 대해 미국측으로부터 덤핑 제소가 행해지고, 더욱이 同 12월에는 256K DRAM에까지 상무부에 의해 덤핑조사가 실시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하에, 덤핑 문제와 시장 확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美·日간의 협의가 행해져, '86년 7월 사실상 최종적인 결론을 내고 同 9월 美·日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며, DRAM 및 EPROM의 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중단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다. 일방적인 對日 관세조치의 도입과 그후 경과

'87년에 들어 미국은, 제3국 시장에서 일본産 반도체의 덤핑이 계속되고 있고, 對日 시장개방도 개선된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3월에는 미 상하원이 對日 비난 결의를 채택, 동 4월 일본으로부터의 퍼스컴, 전동공구, 칼라TV의 對美 수출(3억弗 상당)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하였다.

그후, 제3국 덤핑 해소를 이유로 '87년 6월 및 11월 두번에 걸쳐 對日 관세부과 조치의 일부가 철회되었지만, 對日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1억 6,400만弗 상당의 조치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라. 대외 시장개방 현황과 일본측의 노력

일본시장에 있어서의 외국계 반도체 판매액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89년 제3/4분기에는 협정체결시 ('86년 제3/4분기)에 비교해, 달러 Base로 2.3배, 円 Base로 2.1배에 달하였다.

또한 일본 시장에 있어서의 외국계 반도체의 쉐어도 WSTS(세계 반도체 무역통계) Base로는 협정 체결시의 8.6%에서 '89년 제3/4분기에는 12.0%로, 통산성 조사 Base로도 10.3%에서 15.9%로 상승하는 등, 협정체결 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외국계 반도체 기업의 쉐어가 완만한 신장에 머무는 이유는, 일본시장 자체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쉐어의 폭이 작아져 버린 이유도 있고, 또 일본 반도체 시장의 약 40%를 점하는 가정용 반도체 분야, 약 15% 정도를 점해 앞으로 현저한 성장이 기대되는 DRAM 분야 등에 의해, 외국계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외국 반도체 업체의 일본시장 진출을 확대키 위해 일본측은 아래와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 기업별 추진계획

'88년 5월, 일본전자기계공업회(EIAJ) 안에 대형 반도체 User 63社로 구성된 외국계 반도체 User 협의회를 설립, 同 8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것을 근거로 全 User 기업이 각사 나름대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각사 모두 이에 따라 공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등 외국계 반도체 업체의 구매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2) 가정용

6월 美·日 업계 회담에서 가정용 반도체 Task Force의 설치를 합의하였고, 7월에 제1차, 9월에 제2차 회담을 개최하였다. 일본측은

각사의 대표적인 가정용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全 list를 제시하는 등 미국측의 이 분야에 대한 참여를 촉진중이다.

(3) HDTV 분야

장래, 높은 반도체 수요가 예상되는 HDTV 분야에 대해서도 '89년 11월 美·日 업계간에 HDTV용 반도체 협력 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하고, 금후 HDTV용 반도체의 기술동향, 시장동향 등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4) 기업간 연계의 확대

以上과 같이 업계 Base의 노력에 대해 도시바와 모토로라, 히타치와 TI 등, 제조·기술·판매의 각 부문에 있어서의 美·日 기업간의 상호 연계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마) 미국측의 공급 확대 노력

한편, DRAM 분야의 장래 중요성을 감안해 同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관민 합동의 연구개발 Consortium인 SEMATECH가 SIA 주체로 '87년 설립되었다. 또한 '89년에는 DRAM의 공동 생산회사인 「US Memories」가 설립되었다.

3) 수퍼 컴퓨터

가. 문제점

수퍼 컴퓨터란 초고속 과학기술용의 컴퓨터를 말하는 것으로, 수년전까지는 클레이社 等 미국기업의 독점 시장이었지만, 최근 급속히 일본제가 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다. 수퍼 컴퓨터의 이용분야는 항공, 우주, 원자력, 군사기술 등의 제한된 분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일렉트로닉스, 건축, 컴퓨터 그래픽, 기상분석, 금융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에 있어서도 시장이 큰폭으로 확대되어,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미국정부의 문제의식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미국제 수퍼 컴퓨터가 일본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도입실적이 거의 없는데서 '일본 정부기관 시장은 폐쇄적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국립대학 등 정부기관이 현재까지 도입한 수퍼 컴퓨터 台數는 38台, 그중 미국제 수퍼 컴퓨터는 7台(NTT 구매分 포함)로 점유율은 약 18%이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첫째, 일본 정부기관이 '87년 8월에 결정한 「수퍼 컴퓨터 도입절차」라는 기본방침에서 국내외에서 무차별적인 공평한 도입을 행하고 있으며, 실제 7台의 미국제 컴퓨터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교육용 컴퓨터의 할인에 대해서는 미국의 컴퓨터 조달 관행을 포함, 美·日 양국이 공동연구를 행할 것을 미국측에 제안했다.

나. 「수퍼 컴퓨터의 도입절차」의 책정

'86년 12월 미국 대표단은 일본의 공동시장이 미국産 수퍼 컴퓨터에 대해 폐쇄적이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MOSS 협의의 場에서 해결하고 싶다고 표명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87년 1월 하순, 일렉트로닉스 MOSS 회담 및 同年 3월 초순에 MOSS 전체회의를 개최해 첫째, 일본 정부기관의 조달은 도입절차가 불투명하고 배타적이며 둘째, 교육용 컴퓨터에 대해 상당한 할인이 시장질서를 흐리고 있어, 이로인해 미국産 컴퓨터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87년 7월 일본은 Action Program 실행 추진위원회(各省청의 차관레벨로 구성)에서 「수퍼 컴퓨터 도입절차」는 첫째, 컴퓨터 도입 계획을 관보에 공표하고, 가능한한 초기부터 공급자에게 내외 무차별한 경쟁기회를 제공할 것.

둘째, 수퍼컴퓨터의 특성을 고려해, 제안작성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거쳐 적절한 기술심사를 실시할 것.

세째, 本件 절차를 실시할 때는 개정된 '정부조달협정' 요건과의 조정을 계속할 것.

네째,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특수법인을 실질적인 적용대상으로 할 것 等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수퍼 컴퓨터 도입절차」에 의해, 상당수의 수퍼 컴퓨터가 정부기관에 도입되고 있다.

다. 「수퍼 컴퓨터의 도입절차」 실시 이후의 경위

'87년 7월 긴급 경제대책의 일환으로서, 補正豫算에 의해 동경 공업대학에 ETA社의 수퍼 컴퓨터 1台, 공업 기술원 전자 종합 연구소에

1台 합계 2台의 미국産 수퍼 컴퓨터 조달을 결정했다.

'88년 2월 10일 美·日 전문가 레벨의 회담을 개최해 本 도입절차의 실시상황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 회담에서 미국측은 스미스 서한에서의 지적사항 등, 「도입절차」의 이행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하였지만, 일본측은 本件은 도입기관쪽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 오히려 도입기관에 적극적으로 Approach하지 않았던 미국 기업의 노력부족에 문제가 있었다고 반론했다.

또한 同 회담에서 미국측은 교육용 컴퓨터의 가격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했으나, 일본측은 교육용 컴퓨터 시장의 특수성, 재정제약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미국측에도 같은 관행이 있으며, 本件을 거론하려면 美·日 쌍방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8년 9월 1~2일 美·日 무역 위원회가 개최되고 同年 10월 5~7일에는 전문가 레벨의 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미국측은 「도입절차」에 대해 평가하면서, 일본 정부기관의 예산제약으로 인해 미국産 컴퓨터의 조달이 순조롭지 않다는 요지의 지적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本件은 美·日 양국시장을 대상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주장하고 미국에 있어서의 수퍼 컴퓨터 조달실태(경쟁입찰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89년 4월 28일 USTR은 「무역장벽 연례 보고서」를 공표하면서 일본정부기관의 수퍼 컴퓨터 조달에 미국 기업이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5월 25일 USTR은 종합 무역법 수퍼 301條에 근거해, 일본 정부의 수퍼 컴퓨터 조달방식에 대해 우선 협상 대상 관행으로 지정하였다.

수퍼 301조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일본측은, 미국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 '89년 9월 8일 美·日 무역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미국측은 '89년 10월 수퍼 컴퓨터 협의 이후, 일본 정부의 수퍼 컴퓨터 도입경과, 배경, 조달계획, 예산, 절차의 면에서 일본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일본측은, 수퍼 컴퓨터 협의 이후에는 국립 천문대가 富士通에 낙찰시켰으며, 앞으로 10件의 도입 계획이 있는 「수퍼 컴퓨터 도입절차」에 대해서도 성실히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측이 美·日 시장관행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측은 거부는 하지 않지만,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다고 회답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美·日 전문가 회담을 개최한 자리에서 미국측은 일본 정부기관의 조달과정에 대해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되 있지 않다고 발언, 이에 대해 일본측은 할인에 지나친 점이 있다면 시정할 방침이나, 그 할인율을 구체적으로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반론하였다.

4) TRON

가. TRON이란

TRON(The Realtime Operating Nucleus)이란, 새로운 컴퓨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념 및 그것을 표현하는 일련의 방법을 말한다.

구체적인 활동은 컴퓨터의 OS(기본소프트)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준거하는 인터페이스의 방법을 작성하는 데 있으며, (社)TRON 協會가 사용서를 작성하고 각 메이커는 이를 표준으로 해서 독자의 제품을 개발한다. TRON의 특징은 다음 3가지이다.

선진성 : '90년대의 선진 기술수준을 기초로 해서, Real Time性이나 다국어 처리, 사용의 편리함에 뛰어난 컴퓨터를 목표로 한다.

개방성 : TRON 방식의 작성에 관해서는, 이에 참가하고 싶은 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참가가 가능하며 작성된 방식은 널리 일반에 공개되어 누구라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표준성 : TRON 방식은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한정하지 않은 인터페이스 레벨에서의 표준화이기 때문에, 메이커나 기종이 달라도 호환성의 확보와 조작법의 표준화 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TRON은 산업용 로보트 등의 제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ITRON, 퍼스컴(워크스테이션) 등을 대상으로 하는 BTRON, 통신장치(교환기기, 전송장치) 등의 네트워크 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CRON,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대상으로 하는 CHIP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나. TRON 협회

(株)TRON 협회는 TRON에 관한 보급, 개발, 조사연구, 사용서 작성 등을 통해 새로운 컴퓨터 체계의 창출을 도모하고, 정보화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일본과 세계의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88년 3월에 설립되었다.

同 협회의 회원은 '89년 8월말 현재 140社이며, 이 가운데는 미국의 모토로라, 서독의 시멘스 등 외국기업 6사, 일본 IBM, 일본 TI, 일본 AT&T 등의 외자기업 16社도 포함되어 있다.

2 일본·EC관계

1.) 일본·EC 경제관계

일본·EC관계는 EC로부터의 제품 수입증가 등을 배경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양호한 관계이다. 그러나 무역불균형이 '89년에 들어서서 감소경향에 있다고는 하지만 '88년에 228억弗에 달해 EC가 무역 불균형을 또다시 정치문제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EC는 '92년 통합을 앞두고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을 취함으로써 對EC 제조업 투자가 '86년 이후 급증하여 현재까지 424件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EC제국도 일본시장을 비지네스 기회로 포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일 수출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2.) 개별문제

가. 對日 차별 수량제한 문제

EC 회원국 중에는, 일본에 대해서 부당한 수입 수량제한을 유지하는 몇개의 국가가 있다.

일본, EC間에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EC側은 '89년 8월 8일 40개 품목의 수량제한을 철폐한다는 관보를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91개 품목에 대해 대일 차별 수량제한이 존속하고 있다.

전자부문에서는 유선통신기기(포르투갈), 라디오, TV용 부품(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음극선관(이탈리아), 일부 전자계측기기(프랑스)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수량제한과 對日 차별이라는 점에서 二重의 의미로 GATT 위반이다. 일본정부는 완전한 철폐를 향해 앞으로도 계속 교섭해 갈 것이다.

나. 부품덤핑, 원산지 규정 문제

EC는 최근 무역 투자정책에 있어, EC 이외의 지역에서 EC에 수출할 때는 반덤핑 규정을, EC지역내의 생산에서는 부품 덤핑규정을, 제3국 생산에 대해서는 원산지 규정를 각각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부품 덤핑규정에 대해서는 EC가 일본만을 대상으로 해, 전자타이프라이터, 복사기, 프린터 등에 부품 덤핑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EC의 덤핑 규정이 「우회방지」라는 명목하에 실제로 로칼 콘텐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써, GATT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토론회 설치를 요구해 '88년10월 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2회의 심의가 행해졌다.

다. 반도체 문제

'87년3월 EC는 美·日 반도체 협정과 관련해 일본을 GATT에 제소, '88년5월에는 일본의 제3국 모니터링이 수출 제한적인 기능을 해, GATT에 위반한다는 보고가 GATT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모니터링 실시 시기를 수출전에는 수출후로 변경하는 등 GATT 관련조항의 조정내용을 '89년3월 이사회에 보고, '89년6월부터 실시했다.

한편 '87년부터 EC 위원회가 추진해 온 일본기업의 DRAM 덤핑조사에 대해서는 각 기업과 EC 위원회 사이에 「가격약속」을 맺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동시 병렬적으로 진행되어 온 EPROM의 덤핑조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